

전주시 “자기자본 10% 유지·시설 운영 전반 진단”

최서연 전주시의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대책’ 질의에… “협약서 따른 유지보수 지시 신속 이행하겠다”

전주시는 13일 최서연 전주시의회 의원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대책’ 질의에 대해, “자기자본 10% 유지 및 시설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협약서 제44조에 따른 유지보수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먼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 노·사·정·당이 함께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환경과 안전개선에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주시, 노조, 운영사 간 수차례 간담회와 내부검토를 거쳐 운영사에서 요청한 12건 167억 예산 중월수예산 27억을 2025년 예산에 우선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보험이 미반영된 재활용품 외주 처리비와 시설복구비 16억의 80%인 13억은 변호사 자문과 실시협약을토대

로올해 지급하였다. 당시 공동합의문 이행,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 등을 고려하여 시설이 정상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보험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한 근로자에 대한 합의문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후 6명은 타 기업 취업과창업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하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음폐수 정산, 보험 청구내역 등 확인 없이 예산을 지급한 사유는 2024년 1월 외부음폐수 반입 운영원가 용역결과, 운영사가 납부해야 할 정산수익은총 9억 6천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이 중 4억 9천만원은 올해 3월 중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4억 7천만원은사업시행자에게 매월 지급

하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여섯 가지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서 제15조 5항에 따라 자기자본 10% 유지, 대수선비 적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충족 시 보완 조치를 강구해 가도록 하였으며, 전주시, 의회,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협약서 제44조에 따른 유지보수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협약서 제5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90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마이행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 정산 및 법적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정산 체계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폐형광등 보관시설 증설, 악취관리 강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규 소각장 설립 시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검토 중인 신규 소각장의 BTO 방식 적용여부는 특정 방식의 배제 여부를 확정짓기보다는 재정 여건, 공공성 확보, 효율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마쳤다.

/김욱기 기자



완산구 관내 주요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완산회가 완산구 관내 음식점에서 3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방향 논의

완산회, 3월 정기회의 개최

완산구 관내 주요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완산회(회장 조병두)가 완산구 관내 음식점에서 3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완산회(회장 조병두) 임원진 및 회원, 감용삼 완산구청장이 참석하여 시장 및 구정 홍보사항을 공유하고 완산구 지역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지역 상권과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및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도시 환경 정비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며, 완

산구를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조병두 완산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완산구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이 자리가 뜻깊게 느껴지며, 완산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용삼 완산구청장은 “완산회가 완산구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완산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더욱 살기 좋은 완산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남관우 의장·김동현 원내대표, 박혜숙·김정명 의원 첫날 천막농성 참여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본격적인 행동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2일부터 의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 농성에 돌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천막농성 첫날에는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김동현 원내대표, 박혜숙 의원, 김정명 의원이 참여하여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남관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정 파고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숙의를 끝내고, 국민의 뜻을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 국정 운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전주시민들과 함께 탄핵이 실현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으며, 김정명 의원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들은 매일 4명씩 교대하며 천막을 지키고 철야 농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농성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실현될 때까지 민주당 중앙당과 연대하여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며, 각지의 지방의회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동 행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2일부터 의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 농성에 돌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노후화된 도로·인도 재포장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감용삼)가 봄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통행 및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도로 및 인도를 패격하게 정비기로 했다. 완산구는 이달부터 약 36억 원의 예

산을 투입해 서원로 등 11개 노선의 도로와 여울로 등 13개 노선의 인도 구간에 대한 재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구는 신속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동절기인 지난 1·2월 중 해당 노

선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신속히 추진했으며, 설계가 완료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재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도로가 파손돼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 단기업체와 계약 후 보수하고, 비교적 경미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도로보수원 9명)을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구상이다. 감용삼 완산구청장은 “도로 재포장과 인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언제나 편안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전주시는 지난해 새롭게 발생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 세정과에서는 각 세입부서로부터 이관받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세외수입 이관 규모를 기존 5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체납자를 전 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입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 체납액 17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사항 등 조사에 착수했으며,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관된 고액 체납자에 대

한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징수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 및 수색 등 전면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일 신규 이관 체납자 110명에게 ‘이관 안내 및 체납 처분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재산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의 체납 처분과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 제재가 이뤄질 것임을 통보했다. 박은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전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